

‘중전선언’ 남북정상회담서 논의할까

트럼프 “남북 중전문제 논의 축복” 언급 관심 집중 평화체제 협상, 중전선언 지지 단정 어렵다 분석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 논의가 11년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중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다.

중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현행 정전체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핵심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적어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안보관련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는 분석도 가능하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병철 선임 연구원은 18일 “비핵화 논의에서 중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는 불가피한 논의대상”이라며 “중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에 명시됐고, 그 평화체제 논의의 ‘입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6·25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구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에 들어갔다.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중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였다.

중전선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들어간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중전’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지는 취지였다.

비록 당시엔 한국의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지만, 남북·북미 연쇄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11년 전의 3~4차 중전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거나 비슷한 문구로 사실상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과의 ‘안보 대 안보’ 교환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될 것인데, 중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적이고

선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그것을 시도하겠다고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전선언 구상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부활하더라도 관련국들의 지지 속에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간의 중전선언을 “축복한다”고 밝힌 것이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 차원에서 중전선언을 하는 구상을 지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중전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는 휴전관리체제에서 중전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휴전관리의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변화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북한 비핵화 전에 이뤄질 경우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김정은 회담 배석은?

정의용·서훈 이외 통일·외교·국방장관 예상 북한 배석자 아직 몰라...조만간 고위급서 조율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정상을 보좌할 공식 수행단에 누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27일 열리는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회담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식 수행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우리측 공식 수행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도 외교안보부처의 수장들도 두루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급적 회담성격상 국방·외교·통일 장관까지를 공식 수행단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

했다. 외교부 장관이 공식 수행단에 포함된다면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장관을 포함하려는 것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과감한 진전’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수행단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평창동계 올림픽 기간 방남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식 수행단에 포함될 수 있다. /연합뉴스

나라사랑 기도포럼 “임우진 지지” “광주 정치 실종·민회 훼손 심각”



나라사랑기도포럼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을 지지하고,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라사랑기도포럼은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과정에서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광주정치가 실종되고 민회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패권주의적 패거리 공천이자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김중찬 기자



평화당, 선대위 출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6·1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배숙 대표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광주 시장·구청장 ‘인물난’

시당,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 25일까지 접수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시당은 물론 구청장 선거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통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광주지역 바른미래당 소속 예비후보는 총 10명이다. 광주시장·구청장 공천 신청자는 ‘0’ 명이고 광주시의원 2명, 구의원 예비후보는 8명뿐이다.

국민의당이 쪼개져 바른미래당과 나눠진 민주평화당에서 구청장 3명, 광역의원 11명, 지방의원 23명 등 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된 것과 큰 차이가 난

다.

바른미래당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적 관계,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마했는데 당이 구청장 후보조차도 내지 못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민주당과 평화당에서 각각 2명의 후보가 출마표를 던졌지만 바른미래당은 ‘조

용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은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돼 지방선거 이후 지역정권이 재정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광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오는 21~25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으로, 시당 홈페이지 배너 클릭 혹은 웹사이트(<http://nomination.bareunmirae.net>)에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조기철 기자



정가브리핑

김경진, 기술혁명시대 거버넌스 정책토론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 정책과 거버넌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향후 우리 정부가 나갈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와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과학기술의 철학적 의미, 해외사례 및 산업 변화를 기반으로 한 미래예측, 정부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



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와 연구자, 언론인, 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영산강부지 친수공간 조성방안 협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철홍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면담을 갖고 광주 북구관내 영산강 국가하천 부지의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안들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영산강 국가하천부지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영산강 이용객이 늘어 친수공간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친수지구를 만들어 휴식공간과 생활체육 체협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홍 익산국토관리청장은 “광주시와 북구청에서 근린친수·친수거점 지구에 파크포스트 조성 위한 하천점용 요청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반보전지구도 추후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는데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P&J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8-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



대규모 연회장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